

중국 거시경제 발전 추세 평가 및 전망

2017년 제4회 한·중 경제포럼

1. 주 제: 중국 거시경제 발전 추세 평가 및 전망
2. 일 시: 2017. 12. 19(월) 16:00~18:00
3. 발표자: 중국거시경제연구원(AMR) 진루이팅(金瑞庭) 박사

1. 중국 거시경제 현황

□ 외부환경의 개선: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 거시동력의 증대, 성장 안정성 확대

-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등 국제기구들은 중국의 2017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6.8%와 6.5%, 6.8%, 2018년을 각각 6.5%, 6.5%, 6.3%로 예상함.
- 세계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경제 회복기에 진입함. 미국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추진 된 정책 추진 효과로 인해 2017년 3분기 GDP 성장률이 3.3%를 기록했고, 일본은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 등으로 3분기 성장률 0.6%를 기록하였으며, 유로존도 3분기 성장률 0.6%를 기록하는 등 주요국 성장률이 상승함.

표1. 2017년 1분기~3분기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GDP 성장률 추이

	2017Q1	2017Q2	2017Q3	2017년(IMF)	2018년(IMF)
미국 (전기대비)	1.2%	3.1%	3.3%	2.2%	2.3%
유로존 (전기대비)	0.5%	0.6%	0.6%	2.1%	1.9%
일본 (전기대비)	0.4%	0.6%	0.6%	1.5%	0.7%
한국 (전기대비)	1.1%	0.6%	1.5%	3.0%	3.0%
브라질 (전년대비)	-0.35%	0.3%	1.4%	0.7%	1.5%
인도 (전년대비)	6.1%	5.7%	6.3%	6.7%	7.4%
러시아 (전년대비)	0.5%	2.5%	1.8%	1.8%	1.6%
남아공 (전년대비)	1%	1.1%	1%	0.7%	1.1%

자료: 각 국별 통계, IMF

그림1. 주요 선진국의 GDP 성장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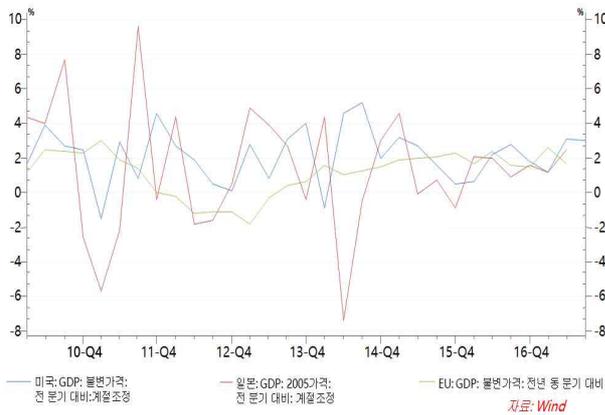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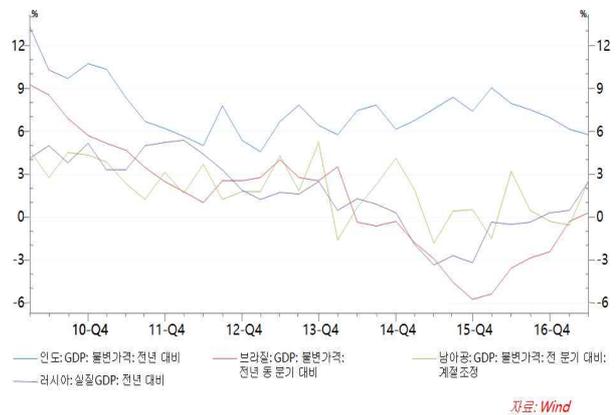


그림2. 주요 신흥국의 GDP 성장률 추이



— 글로벌 인플레이션 하락추세에서 반등

- 2017년에 들어서서 주요상품의 가격 상승에 따라 일부 지역은 디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되기 시작함.
- 2017년 1~3분기 전 세계 소비 물가는 전년대비 0.7%p 증가한 2.2%를 기록하였으며, 그중 개도국의 물가지수가 전년대비 0.8%p 증가한 3.6%, 선진국은 전년대비 1.2%p 증가한 1.6%를 기록함.

— 국제무역이 활발하게 증가

- IMF는 2017년 국제무역 증가율이 4.2%를 기록하여 3년 만에 경제성장률(3.6%)을 상회 할 것으로 예측함.

그림3. 2015년 이후 세계 주요 국가별 수입액 변화



그림4. 세계 주요 국가별 수출 대비



- IMF가 최근 발표한 2017년 및 2018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7월 발표 예측치보다 각각 0.1%p씩 상승한 3.6%, 3.7%로 이는 세계경제가 회복세에 진입했음을 의미함.
- △국제 주요상품 가격의 소폭 변동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적 발전 △세계투자자와 무역의 안정적 회복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둔화 △양호한 취업증가세로 인한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 기초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성장 커플링 △스필오버 효과를 통한 글로벌 경제와 중국경제 간의 연동성이 증대되고 나아가 중국경제의 안정성도 제고됨.
- 중국의 GDP 성장률은 9개 분기 연속 6.7~6.9%의 합리적 구간을 유지하고 있으며, 국제자금 이동 및 외환시장의 공급과 수요가 기본적 균형을 유지하였으며, 외화보유액도 9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함.

그림5. 중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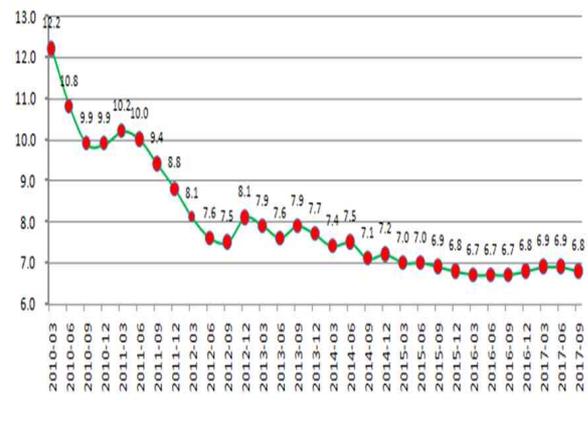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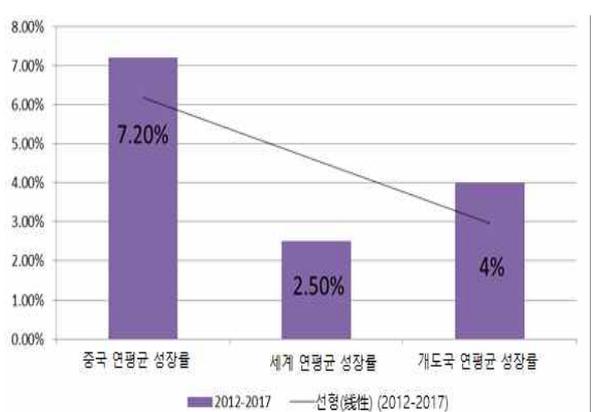


그림6. 중국 전 세계 개도국의 연평균 GDP 성장률 비교



□ 공급측 구조개혁과 신성장 동력에 따른 성장의 협동성 증대

- ‘공급과잉 해소, 부동산 재고 소진, 기업 금융리스크 최소화, 기업 원가 절감, 유효공급 확대(三去一降一补)’ 등 공급측 구조개혁의 주요 5대 과제에서 뚜렷한 성과를 기록함.
- o 공급과잉 해소와 관련해서 생산성이 낮은 업종은 적극 퇴출시켜 5대 에너지 고소비 제조업의 부가가치가 현저

하계 감소하였으며, 화학 제조, 비금속광물 제조, 흑색금속 제련 및 가공, 비철금속 제련 및 가공, 석유 가공업
중과 핵연료 가공업 등 제조업 생산력도 대폭 감소함.

- 2017년 1~10월, 에너지 고소비 산업의 부가가치 증가속도는 지속적으로 둔화되었으며, 5대 에너지 고소비 제조업의 투자는 2.2% 하락함.
- 부동산 재고는 최근 3년간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장 가격의 증가폭도 둔화됨. 1~2선 도시의 부동산 재고는 거의 소진되었으며, 3~4선 도시에 아직 재고가 상존하는데 향후 이 지역의 부동산 리스크를 유의해야 함. 과거 국내외적으로 중국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로 부동산을 언급했는데 현재는 정책조정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며, 더 이상 가격 급등 현상도 나타나지 않음.
- 기업의 금융리스크 최소화화 관련해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금융의 효과가 증가하고 M1과 M2 증가율 격차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자금이 실물경제가 아닌 금융부문에 유입되는 현상이 일부 개선됨.
- 기업의 원가 절감과 관련하여 실물 부분에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원가와 이익 증가율의 격차가 축소됨. 특히 영업세 개혁 조치를 통해 2015년부터 기업 이익 증가율이 원가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기 시작함.
- 유효공급 확대와 관련해서 공급의 질적 제고가 이뤄지고 전통산업의 고도화가 가속화되었으며, 첨단기술 제조업 투자가 급증하고 농업, 교통운송, 수리(水利), 환경보호와 인프라시설 등 유효공급이 확대됨.
- 적극적 재정정책과 온건하고 중성적인 통화정책, 산업/지역 등 정책의 협동성 증대, 시장 공급-수요관계의 지속적 개선, 공급-수요의 매칭도 향상, 서비스 소비를 통해 중국경제의 성장세가 확대됨.
- 2017년 1~3분기 기준, GDP내 2차 산업과 3차 산업 부가가치 비중은 각각 40.1%와 52.9%로 전년대비 0.5%p와 0.1%p 증가됨. 최종 소비지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64.5%로 전년대비 2.8%p 상승함.

그림8. 2017년 1~10월 중국 5대 에너지 고소비 산업 생산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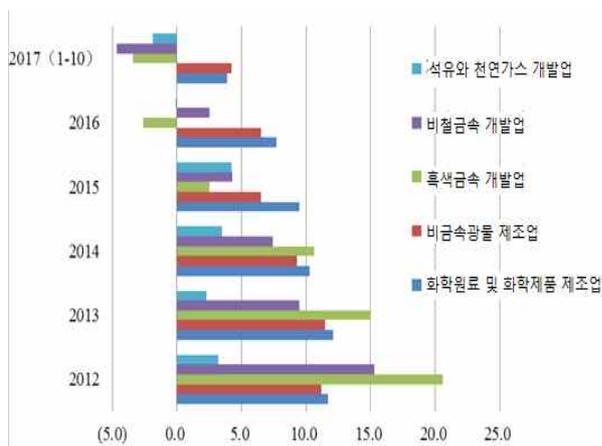


그림9. 중국의 상품주택 재고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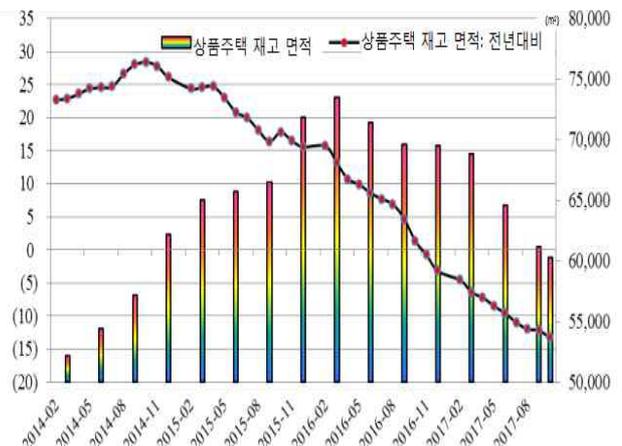


그림10. 중국의 M1, M2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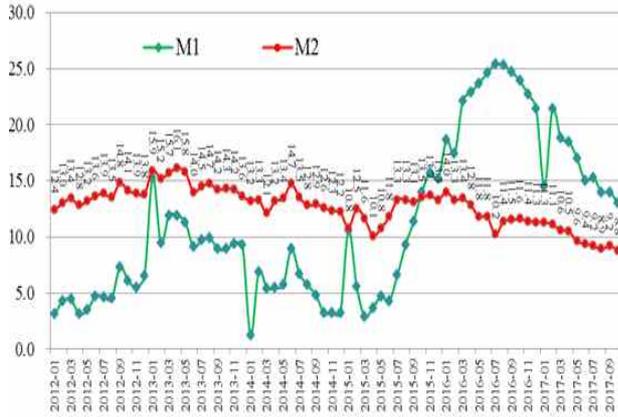


그림11. 중국기업의 이익과 원가 추이



- 신규(新)성장동력의 공동 작용에 따라 성장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지속가능성이 증대됨.
 - 구(旧)성장 동력의 전환 가속화, 신성장 동력의 굴기 가속화, ‘존량 활성화(存量优化)’와 ‘증가량 향상(增量提升)’ 공동 추진, 공급 시스템 질적 개선 추진, 유효한 수요 잠재력의 활성화 등을 추진함.
 - 1~3분기 공업 생산능력 이용률은 76.6%(전년대비 3.5%p 증가)로 최근 5년 사이의 최고치를 기록하고, 전략적 신흥 서비스업의 영업이익은 17.5% 증가함.
 - 새로운 4대 발명으로 불리는 ‘고속철도, 공유자전거, 즈푸바오(支付宝),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하고 있음. 그중 고속철도의 주행거리는 1만km를 초과하고 공유자전거는 베이징시(北京)에만 약 230만대가 도입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했으며, 즈푸바오는 ‘11.11’ 온라인 쇼핑일 당일 거래액이 1,600억 위안을 초과하였는바, 신 4대 발명은 중국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부상함.
 - 첨단기술 제조업 부가가치는 13.4% 증가함(규모이상 기업보다 6.7%p 높음). 첨단기술 제조업에 대한 투자, 첨단기술 서비스업 투자와 제조업 기술개조 투자는 각각 16.8%, 14%, 13.4% 증가하여 전체 투자 증가 속도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중국의 온라인 매출액은 34.0% 증가함. 특히 다롄(大连)에서 생산되는 5축 첨단 수치제어장비, 칭다오(靑島)에서 생산되는 하이얼(海尔) 세탁기, 선전(深圳)에서 생산되는 드론이 고속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선도적인 지위를 차지함.
 - 6대 에너지 고소비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2%로 하락한 동시에 2017년 11월 중국의 첨단기술 제조업과 장비제조업의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각각 14.4%와 10.3% 증가하여 증가율이 전체 규모이상 제조업 대비 각각 8.3%p와 4.2%p 높은 수준에 달함.

□ 시장 환경과 사회예측의 공동 개선: 미시 주체의 경제효과 증대, 성장의 연동성 개선

- 시장가격의 전반적 안정, 투자환경, 소비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의 개선을 통해 제조업 PMI지수는 15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비제조업 비즈니스 활동지수는 13개월 연속 높은 경기구간을 유지함.
 - 1~10월, 규모이상 공업기업 이익총액은 23.3% 증가, 사회노동 생산성은 6.6% 증가, 도시 신규 고용창출

1,191만 명(목표치 초과 달성), 도시 조사 실업률과 31개 대도시 조사 실업률 모두 5% 미만, 1~3분기 중국 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의 실질 증가율은 7.5% 달성함. 특히 투자와 소비의 증가율 격차가 축소되고 점차 균형을 이루기 시작함.

그림14. 중국내 주요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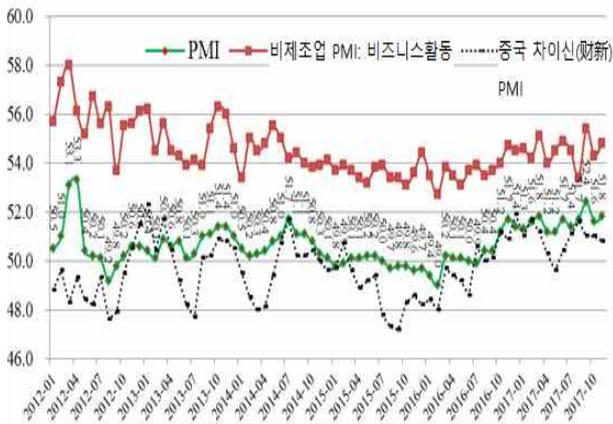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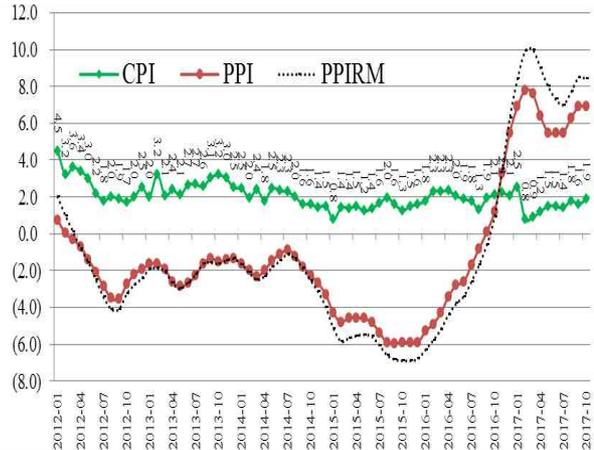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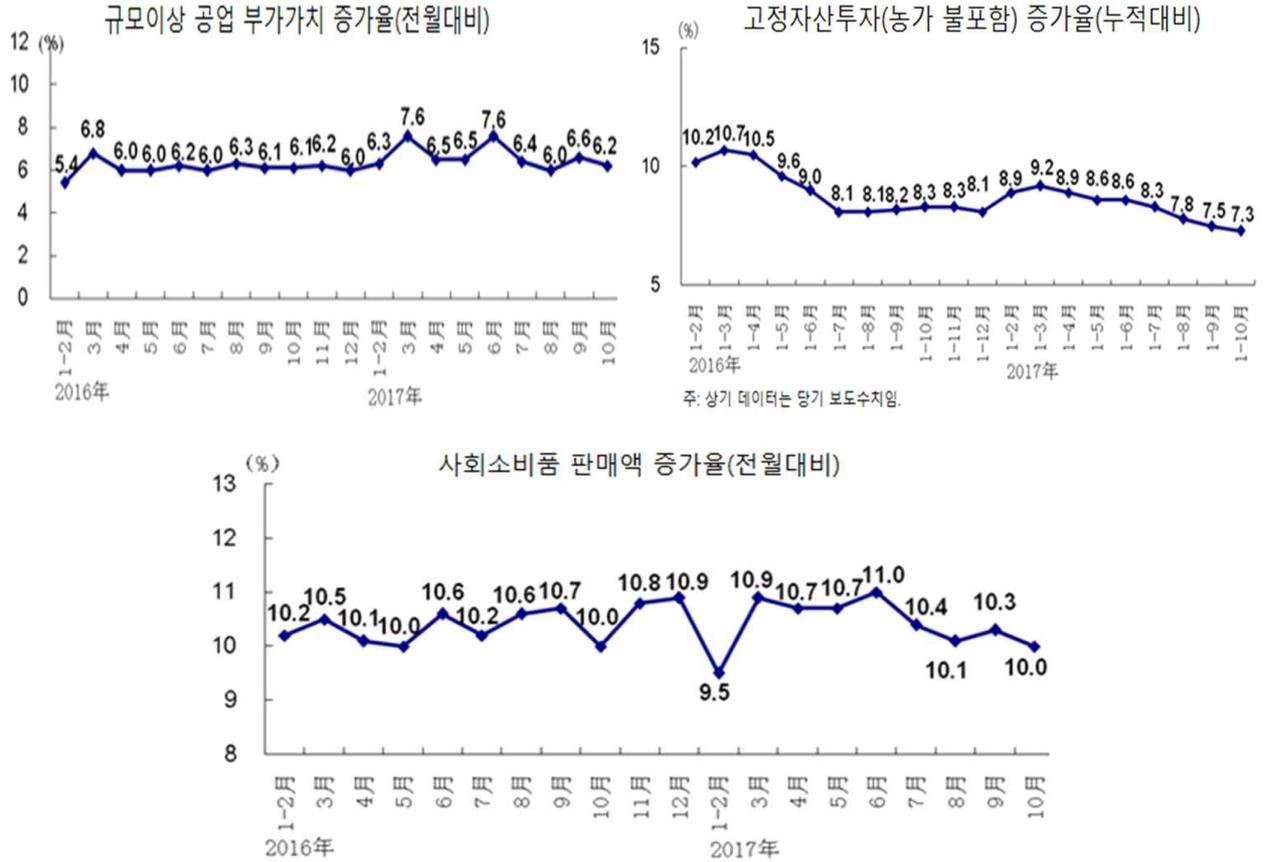


그림15. 중국내 CPI, PPI, PPIRM 추이 비교



- 2017년 10월 중국의 거시경제 성장률은 시장 예측치에 다다르지 못함.
 - o 10월 중국의 규모이상 공업 부가가치는 전년대비 실질 증가율이 6.2%로 전월대비 0.4%p 하락함.
 - o 1~10월 중국의 고정자산투자(농가 불포함)는 51조 7,818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3% 증가, 증가율은 1~9월 대비 0.2%p 하락하였는데 그중 부동산 개발투자액은 9조 544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7.8%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1~9월 대비 0.3%p 하락함.
 - o 10월 소비총액은 3조 4,241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0.0% 증가하였지만, 증가율은 전월대비 0.3%p 하락함.
 - o 10월 공업 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사회소비품 판매액이 소폭 하락하여 시장예측에 달하지 못하였지만, 월별 지표의 작은 변동은 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추세에 영향을 주지 않음.
 - o 4분기 경제성장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나 2017년 경제의 안정적인 회복, 안정적인 성장 추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
- 4분기 GDP 성장률은 6.7%, 2017년 GDP 성장률은 6.8%로 전망됨.

그림 16. 중국의 공업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사회소비품 판매액의 변화추이



2. 중국 거시경제 평가

□ 2018년 중국 거시경제의 주요 기조: '동태적 균형'

- (공급) 공업과 서비스업의 균형적 발전

- 기계, 전자 등 산업의 안정세 유지, 첨단기술과 장비제조업의 버팀목 역할 증대, 공업용 로봇, 신에너지 자동차 등 신산업의 고속 발전 유지, 공업경제 펀드멘털이 공고화됨.
- 교통운송, 창고, 우편업, 정보전달, 소프트웨어, 정보기술 서비스업의 지속적 발전, 인터넷+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의 활성화, 5대 행복산업의 빠른 발전, 서비스업의 성장 견인역할이 강화됨.

- (수요) 투자, 소비, 수출의 균형적 발전

- 시장 환경 개선 및 수요회복을 통해 제조업 투자와 민간투자가 소폭 증가했고, 부동산투자는 강한 실수요에 힘입어 안정적 증가세 유지했으며, 인프라시설 투자는 지방정부의 레버리지 해소 과정에 있어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생필품 소비가 안정적으로 증가, 인터넷+소비는 여전히 활발하게 증가, 교통통신, 교육/문화/오락, 의료건강 등 개선형·서비스형 소비가 빠르게 증가, 개성화·체험식 소비수요가 활성화, 소비구조 고도화에 따른 소비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된다.
- 국제시장의 회복, 대외무역 환경의 지속적 개선, 국제 전자상거래, 시장조달 등 새로운 업계 발전의 가속화, 주요 무역대상국과 '일대일로' 국가에 대한 중국의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무역마찰, 해외리스크와 불확실성이 수출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7. 2018년 중국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가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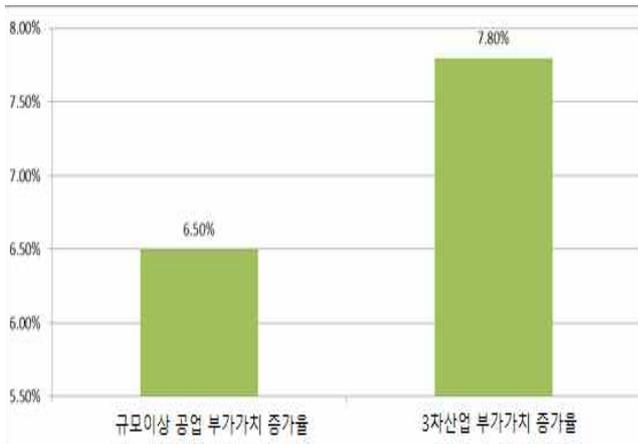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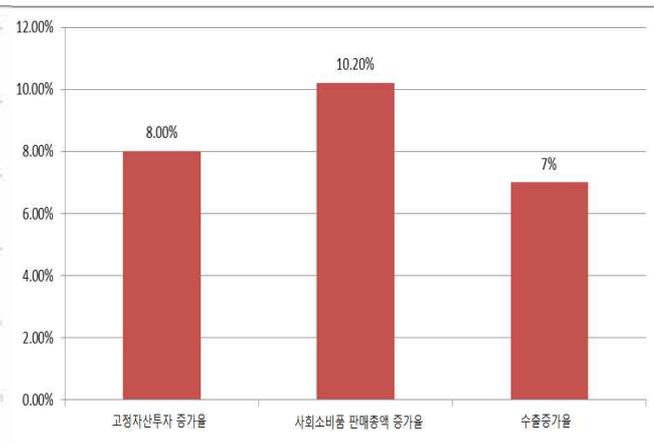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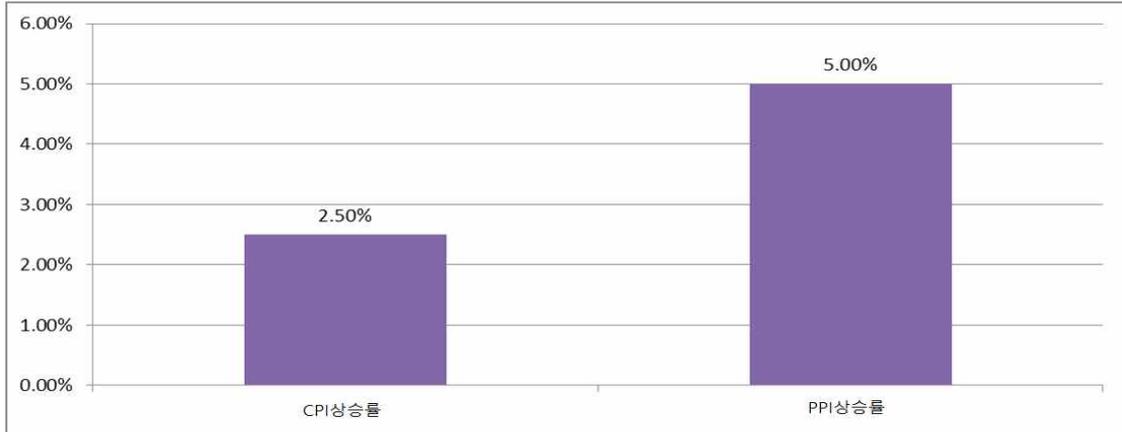


그림18. 2018년 중국의 투자, 소비, 수출 전망



- (지역) 동, 중, 서부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
 - 일대일로, '징진지 협동발전', '창장경제벨트' 3대 전략의 추진을 통해 중서부 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과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동북지역의 제조업 부가가치 증가율 역시 급속 발전하고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에서 증가세를 보였음.
 - 전반적으로 지역발전의 협동성이 증가
- (성장) 주요시장의 균형적인 발전
 - 자동차시장 생산·판매의 안정적 증가, 부동산시장의 '실수요'와 개선수요가 여전히 활성화, 주요상품 수요의 상대적 안정, 주식시장의 '더딘 상승세', 채권시장 안정적 흐름, 위안화 환율 쌍방향 변동의 토대가 견고함.
 - 안정적,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은 시장 안정에 유리한 여건을 제공함.

그림19. 2018년 중국 물가지수 예측



□ 현재 중국 거시경제가 직면한 6대 문제점

1) 실물경제 전반의 낮은 이익률

- 기업 이익률이 이상적이지 못한 상태로 현재 공업 기업의 매출 당 이익률은 6%로 금융부문(평균 15% 이상)에 비해 낮으며, 일부 업종의 기업은 장기간 적자를 기록
- 2017년 기업 이익률이 현저히 제고되었으나, 최근 5년간 이익 증가율은 2011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함. 국내외 압박 속 비용 상승과 혁신 부족이 기업의 고도화를 제약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

2) 투자 효율 저하

- 2017년 1~3분기 GDP 대비 고정자산투자액 비중은 77.3%에 달했으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투자한계효율이 크게 감소하고, 자본산출비율(ICOR, *높을수록 비효율성이 높음을 의미)은 대폭 증가
- 2007~2016년 단위당 GDP에 필요한 총자본형성총액이 2.21에서 6.11로 증가했고, 10년간 중국의 단위당 생산품에 필요한 투자비도 약 2.8배 증가함. 이 같은 고투자 모델은 높은 수준의 지방정부 채무와 민간투자 적극성 감소의 이중적 제약을 받음.

3) 금융부문의 실물경제 견인 능력 부족

- 금융 자원 분포가 불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금융시스템은 여전히 국유기업과 대·중견 기업 중심으로 작동하며, 민간 분야에서 중소기업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음. 현재 중국 전체 기업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받은 대출 규모는 전체의 20% 미만 수준에 불과
- 자금이 실물로 유입되지 못하는 문제(脱实向虚)가 심해지고 있으며, GDP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제조업의 전체 대출액의 20% 미만에 불과하며, 대다수는 부동산과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등 분야에 집중(은행 대출 액의 30% 이상)되어 있음. 일부 자금은 레버리지 확대 방식을 통해 금융시스템 내부에 유입되나 △미비한 금융 조직시스템 △서비스시스템 △감독관리 등으로 인해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금융의 적극성과 능동성이 제약받음.

4) 정책 긴축에 따른 우려 존재

- 지방의 부동산 조정정책, 통화 긴축정책, 환경보호 및 금융 시스템 관리 등 강화로 인해 부동산 시장 변동 리

스크가 증대되고, 금융시장의 지급보증 취소, 용자 난이도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산업체인의 적합성과 조율성이 하락

- 공진(共振)효과와 연쇄반응은 사회예측의 변화를 초래하거나 일부 공황 정서를 일으키거나 경제변동 리스크를 확대

5) 민생보장정책 효과 부족

- 취업 구조의 모순이 확대됨. 특히 ‘구인난’과 ‘취업난’ 현상이 장기적으로 병존하고, 재취업 지원자와 일자리 수요 간 미스매치 현상, 전통산업의 중·저급 직위 감소, 첨단기술 인재 부족, 대학 졸업생 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 고용의 ‘양’과 ‘질’의 불일치 현상이 존재함.
- 탈빈곤 임무가 막중함. 탈빈곤 비용과 난이도의 증대, 탈빈곤 안정성 부족, 질병·공부·재해로 인한 재빈곤 발생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 사회보험 기금의 수지균형 압력 증대, 양로보험기금 수입이 지출보다 낮은 지역 증가, 양로금 지급 압력이 증가함. 중국은 1인당 연소득이 2,300위안 이하를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2016년 기준으로 4,335만 명으로 한국 총인구수의 약 90%에 달함.

6) 외부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 존재

- 트럼프가 추진하는 대규모 조세개혁안의 통과 가능성이 높고, 영국과 프랑스 등도 대대적인 감세정책 추진 중인데 이는 중국의 국제산업 자본유치에 지속적인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제조업의 본국 회귀도 중국 실물경제의 성장 공간을 축소시킴. 무역보호주의 지속 대두, 미국과 EU, 인도 등 국가와 지역이 중국에 대한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 실시, 기타 국가에서도 유사 조치 실시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중국의 무역마찰 대응 난이도를 증대시킬 전망이다
- 지연(地緣, 지정학)정치적 불안정, 시리아, 한반도 등 문제의 지속적 확대는 중국 ‘일대일로’ 건설과 국제 생산 협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함. 특히 한반도의 핵문제로 인해 동북지역의 투자유치가 큰 영향을 받음.

3. 향후 중국 거시경제 대응방향

□ (대응방향) 구조적 문제 입각, 효율 향상 통한 경제의 질적 성장 추진

- 비용 감소 위주의 매커니즘 개혁을 추진

- 높은 비용은 현재 중국의 실물경제가 직면한 핵심 문제이자 공급측 구조 개혁의 난제로 향후 구조적 감세 확대, 제조업 부가가치율과 ‘5대 사회보험, 주택공적금’ 납부율 감소의 검토 필요성 존재
- 아울러 기업 원가감소 위주로 금융, 에너지 전력 등 분야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 필요

- 효율성 제고를 통한 공급구조 고도화에 대한 투자 역할 강화

- 이미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규모가 상당하므로 지속적 규모 확대는 오히려 투자한계효율 하락을 초래하며, 민간투자 활성화와 정부투자 구조 고도화를 통한 투자효과의 전면 제고가 필요

- △시장진입 기준 완화 △공정한 투자환경 조성 △PPP에 대한 민간자본 참여도 확대 △정부투자 구조 최적화 △효율이 높지 않은 프로젝트에 대한 예산 축소 등이 필요
- 혁신형 국가 건설을 위해 국가 혁신 시스템을 재구축
 - 혁신은 현대화 경제시스템 구축에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운 R&D 추가공제 정책 제정 △전통산업의 스마트화 △녹색기술 적용을 위한 개조 지원 △광둥·홍콩·마카오(粵港澳大湾区) 혁신특구 건설 모색 등이 필요
 - 동시에 현대화 된 대학제도, 연구기관 제도 구축을 통해 국가 혁신시스템의 개선을 추진
- 기존 ‘창구기회’를 통한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
 - 현재 중국 부동산시장 리스크는 전반적으로 통제 가능하며, 향후 3년간 도시 주택수요는 증가세를 유지하겠으나 2020년 이후 부터는 하락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기존 ‘창구기회’를 통해 긴축된 부동산 시장 조정정책을 유지, 부동산 투자 증가율 하락에 대한 수용도 확대,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메커니즘 구축을 통해 시장의 연착륙 실현 필요
- 서비스업 개혁 중심의 ‘2차 개방’ 추진
 - 교육, 의료, 양로 등을 포함한 서비스업 전반이 낙후되어 있어 수요 대응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투자를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교육, 건강, 양로 등 분야의 국내외 개방을 추진하여 중국경제의 성장 잠재력 제고 필요
 - 자유무역구 전략 심화 추진, 중국(상하이) 자유무역항 건설을 모색
-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 발생 예방
 - 금융리스크는 현재 중국 경제사회 안정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불확실 요소
 - 지방정부 채무리스크를 해소하고, 법 규정을 위반하거나 변칙된 채무행위에 대해 엄격히 단속 혹은 금지하며, 용자 플랫폼의 채무 증가에 대해서도 엄격한 통제가 필요
 - 보혜금융, P2P, 디지털 화폐, 모바일 결제 등 새로운 금융형태에 내포된 리스크를 경계하고, 자산관리 상품 등의 그림자 은행 리스크 예방 필요

질의응답:

질문 1.

향후 3년간 도시 부동산 수요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부터는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는데 현재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현재 중국의 빈곤인수가 한국 총인구수의 90% 내외에 달한다고 하셨는데 중국의 빈곤층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답변 1.

중국의 도시화가 본격 추진되면서 대규모의 인구가 대도시로 유입되고, 집중 거주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사실 이는 경제학 적으로 보면 자발적인 행위라 볼 수 있음. 인구는 자본 효율성이 큰 도시로 집중되기 마련임. 현재 베이징

(北京), 상하이(上海), 광저우(广州) 등 대도시의 수용력이 최대치에 거의 달한 수준임. 중국정부는 인구를 2, 3선 도시로 분산시키기 위해 승안신구(熊安新区) 등 신규 설립 조치를 포함해 여러가지 노력하고 있음. 하지만 이는 정부가 행정 수단을 통해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지 경제학 측면에서 이루어진 효율에 따른 자발적인 선택이 아님. 사실 대도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현상은 시장의 공정성, 효율과 관련되는 문제임. 중국정부는 자본요소의 공정한 분포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함. 중국의 빈곤층 기준은 1인당 연소득이 2,300위안 미만을 기준으로 함. 2016년 기준으로 중국의 빈곤층은 4,335만 명임.

질문 2.

중국경제의 외부환경이 개선되었지만 도전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령 미국의 재정정책이 새롭게 실시되면 중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기업의 사회보험 납부를 감소 등 이외에 기업 법인세 하향 조정할 확률은 어느 정도 되는가? 또한 법인세를 조정하게 된다면 하락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중국의 자본유출 압력이 증가하는데 2018년에 중국의 금리 혹은 기준을 인상 가능성은 있는가? 중국의 긴축된 정책에 따른 우려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동산 긴축정책과 환경보호 정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긴축된 정책 중에서 중국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무엇인가?

답변 2.

미국의 재정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 법인세율이 35%에서 21%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음. 이 경우 중국의 기업 법인세율(25%)도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중국정부에 대한 영향도 가장 적다고 판단됨. 미국의 기업 법인세율이 21%로 조정되나 중국에서 변화가 없을 경우, 2020년 중국 GDP 성장률은 약 0.74%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경제규모를 감안하면 상당히 큰 손실이므로 중국도 법인세율 조정 가능성이 큼. 하지만 중국의 조세제도는 미국, 한국과 달리 직접세보다 간접세, 유통세(流转税), 부가가치세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직접적으로 감세하는 것이 아니고 과정도 훨씬 더 복잡함. 최종 판단은 정부 지도층에서 하겠지만, 감세가 대세라고 생각함.

중국도 머지않아 금리인상이 예상됨. 현재 미국은 1.5% 수준이고, 한국은 201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금리를 1.5%까지 인상했으며, 유로존은 0, 캐나다는 1%, 영국은 0.5%로 전 세계적으로 금리인상 주기에 진입했음. 개인적으로 2018년 상반기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함.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자본유출 문제뿐만 아니라 위안화 절하 압박을 받게 되어 중국의 자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임.

긴축 정책 중에서 중국경제와 기업에게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것은 환경보호 정책이라 볼 수 있음. 현재는 중국 정부 지도자 실적을 평가할 때 한 가지만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에도 실적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지도자 역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음. 환경보호 기준에 미달할 경우 기업은 생산 중단 및 설비 개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환경도 나빠짐. 2017년 10~11월에 허베이(河北)성과 저장성(浙江)에 기업의 원가감소 문제로 기업을 방문조사 한적 있는데 당시 많은 기업이 환경보호 정책의 영향을 받았다는 입장을 밝혔음. 더 많은 자금을 기술개조와 생산공법 고도화에 투자해야하기 때문에 기업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장기적으로 볼 때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은 중국경제의 질적인 성장에 유리함. 하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 엄격한 환경보호 정책으로 인해 기업의 원료가격이 상승함. 가령 제지기업은 기술설비 고도화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하면서 제지원가가 대폭 상승함.